

광주·전남 학교폭력 증가...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광주 0.6%포인트·전남 0.3%포인트 증가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차 학교폭력 전수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3%, 중학교 2.0%, 고등학교 0.6%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8.7%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 16.9%, 신체폭력 15.1%, 사이버폭력 7.2% 순이다.

피해 경험 장소는 교실 안 30.0%, 복도

16.6%, 운동장·체육관·강당 등 7.6% 순이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1.7%, 점심시간 19.6%, 학교 일과가 아닌 시간 12.9% 순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한 2.5%로 파악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39.2%, 집단따돌림 16.3%, 신체폭력 14.4%, 사이버폭력 7.3% 순으로 집계됐으며, 중·고등학교에

서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장소는 교실이 29.5%로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 16.9%, 운동장·체육관 10.5% 순으로 학교 내 발생이 여전히 높았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으며,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생(50.2%), 같은 학년 다른 반(25.8%) 등 같은 학교 내 학생 간 폭력이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사실 신고는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다. '일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경험이 소폭 증가

한 것은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집단지 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공간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목격 학생의 31.8%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을 활성화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및 집단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고독사 위험, 광주 3만명 vs 전남은 1천명

서미화 의원 "정부, 전산화 서둘러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

지난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실시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에서 광주는 3만 159명, 전남은 1203명에 불과, 지자체별 발굴·관리 체계의 편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위험자 분포와 실제 사망 통계 역시 크게 달라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전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고독사 위험자는 광주의 경우 3만15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6만3136명)에 이어 전국에서 위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광주와 달리 전남은 지난해 고독사 위험자가 120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 고독사 통계와도 괴리를 보였다. 최근 4년(2020~2023년)간 실제 고독사는 광주의 경우 440명에 불과했다. 전남도 비슷하지만 다소 많은 458명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 발굴 규모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전산화를 서둘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2024년 7월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올해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는 연

령·성별별 통계 분석과 사례관리인력 추적이 가능한 전산화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광주·전남,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미수 90건

발생 64건·미수 26건... 올해도 8월까지 잠정 15건 누적

광주·전남에서 5년 동안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사건이 90건 집계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미성년자 약취·유인 발생 사건 수는 2020년부터 매년 30~40건 가량 증가 추세다.

2020년 160건에 이어 이듬해 193건을 기록하다 2022년에는 222건으로 상승, 2023년 260건이 집계됐다.

2024년에는 23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경찰청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

지만도 2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도 5년 동안 관련 사건이 누적 90건이 집계됐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2020년 5건(발생 4건·미수 1건)에 이어 이듬해 9건(발생 7건·미수 2건)이 기록됐다.

2022년 11건(발생 7건·미수 4건), 2023년 8건(발생 6건·미수 2건), 2024년 9건(발생 6건·미수 3건) 등으로 끊이지 않는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발생 5건에 미수 1건이 잠정 집계됐다.

전남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에는 9건(발생 6건·미수 3건)이 집계됐다가 이듬해에는 5건(발생 5건)이, 2022년에는 12건(발생 7건·미수 5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10건(발생 8건·미수 2건), 2024년 12건(발생 8건·미수 4건)이 확인되다 올해도 발생 7건에 미수 2건이 파악되고

있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미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발생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인 만큼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대책을 세우고 발생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교육활동보호포럼 경청하는 교사들 16일 오후 전남 순천만생태교육원에서 누 시스광주전남본부와 전남교육청이 주최·주관한 '존중과 공존, 학교를 바꾸는 힘' 교육활동보호포럼이 열린 가운데 일선 교사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독박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2심 감형

육아 스트레스에 못 이겨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족과 사회의 두터운 지지와 조력이 있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떨치기 어렵다.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누우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

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2차례 유산 끝에 어렵게 낳은 쌍둥이마저 초미숙아로 태어나 서울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다.

A씨는 홀로 육아를 하며 생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남편의 폭언까지 겹쳐 심변을 비판하다 병명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적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민규 기자

전남교육청, 교직원·학부모 대상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남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와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남교육청 누리집 내 온라인 게시판에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 중에 겪는 법률 고민을 전문 변호사가 1대 1로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비는 전액 전남교육청이 부담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검토해 의견서를 회신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상담 과정에서 다루지는 민감한 사안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교직원과 학부모도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상담 신청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검토해 의견서를 회신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상담 과정에서 다루지는 민감한 사안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교직원과 학부모도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직원과 학부모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교육 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경찰, 숨진 대학원생 갑질 의혹 전남대 교수 입건

교수진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숨진 대학원생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일부 교수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반복패괴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전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40대 A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대학원생 B(26)씨가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찰은 B씨의 유서가 담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토대로 강요 행위 등이 일어난 일시 등을 특정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유서를 통해 지목한 또 다른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도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전남대에서는 지난 7월13일 광주 생활관(기숙사) 9동 앞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교수진의 사적 심부름 등 갑질 의혹이 담긴 유서가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에 이르렀다. /최성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